



여야의 난투극 속에 열린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김형오 의장 대신 미디어 관련 3법을 통과시키려하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의장석으로 몸을 날리고 있다.

미디어법 난투극 속 국회 통과

야당 “재투표·대리투표 원천무효” 반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의원직 사퇴 선언… ‘정국 급랭’ F1법 통과 난망

한나라당은 22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3·4·5면>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은 여야의 극한 대결 속에서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으나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는 등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정국은 급속하게 냉각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표결 과정에서 방송법의 경우 재투표가 실시되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법안 통과의 적법성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오 의장이 국회 본회의장 주변 대치사태로 입장하지 못하자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부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을 직권상정, 표결 처리에 불여 각각 통과시켰다.

을 강행했다.

신문법의 경우 재석 의원 162명 중 찬성 152표·기권 10표로, 방송법은 재석 의원 153명 중 찬성 150표·기권 3표로, IPTV법은 재석 의원 161명 중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됐다.

이를 반영하듯 당장 민주당은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고,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 법이 통과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여권은 내각과 청와대 개편 등의 국정쇄신과 국민통합 등을 통해

‘미디어 관련법’ 강행처리에 따른 후폭풍의 최소화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던 본회의장 앞 중앙홀 등

을 비롯해 곳곳에서는 양당 의원들과

보좌진 사이에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잇따라 발생했다. 또, 한나라당이 이

날 미디어 관련법안을 강행처리함에

따라 전남의 최대 현안 법안인 F1 지

원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처럼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기사 3·4·5면>

이를 반영하듯 당장 민주당은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고,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 법이 통과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여권은 내각과 청와대 개편 등의 국정쇄신과 국민통합 등을 통해

‘미디어 관련법’ 강행처리에 따른 후

폭풍의 최소화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던 본회의장 앞 중앙홀 등

을 비롯해 곳곳에서는 양당 의원들과

보좌진 사이에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잇따라 발생했다. 또, 한나라당이 이

날 미디어 관련법안을 강행처리함에

따라 전남의 최대 현안 법안인 F1 지

원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처럼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기사 3·4·5면>

이를 반영하듯 당장 민주당은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고,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 법이 통과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여권은 내각과 청와대 개편 등의 국정쇄신과 국민통합 등을 통해

‘미디어 관련법’ 강행처리에 따른 후

폭풍의 최소화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던 본회의장 앞 중앙홀 등

을 비롯해 곳곳에서는 양당 의원들과

보좌진 사이에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잇따라 발생했다. 또, 한나라당이 이

날 미디어 관련법안을 강행처리함에

따라 전남의 최대 현안 법안인 F1 지

원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처럼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기사 3·4·5면>

이를 반영하듯 당장 민주당은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고,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 법이 통과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여권은 내각과 청와대 개편 등의 국정쇄신과 국민통합 등을 통해

‘미디어 관련법’ 강행처리에 따른 후

폭풍의 최소화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던 본회의장 앞 중앙홀 등

을 비롯해 곳곳에서는 양당 의원들과

보좌진 사이에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잇따라 발생했다. 또, 한나라당이 이

날 미디어 관련법안을 강행처리함에

따라 전남의 최대 현안 법안인 F1 지

원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처럼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기사 3·4·5면>

이를 반영하듯 당장 민주당은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고,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 법이 통과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여권은 내각과 청와대 개편 등의 국정쇄신과 국민통합 등을 통해

‘미디어 관련법’ 강행처리에 따른 후

폭풍의 최소화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던 본회의장 앞 중앙홀 등

을 비롯해 곳곳에서는 양당 의원들과

보좌진 사이에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잇따라 발생했다. 또, 한나라당이 이

날 미디어 관련법안을 강행처리함에

따라 전남의 최대 현안 법안인 F1 지

원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처럼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기사 3·4·5면>

이를 반영하듯 당장 민주당은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고,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 법이 통과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여권은 내각과 청와대 개편 등의 국정쇄신과 국민통합 등을 통해

‘미디어 관련법’ 강행처리에 따른 후

폭풍의 최소화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던 본회의장 앞 중앙홀 등

을 비롯해 곳곳에서는 양당 의원들과

보좌진 사이에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잇따라 발생했다. 또, 한나라당이 이

날 미디어 관련법안을 강행처리함에

따라 전남의 최대 현안 법안인 F1 지

원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처럼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기사 3·4·5면>

이를 반영하듯 당장 민주당은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고,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 법이 통과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여권은 내각과 청와대 개편 등의 국정쇄신과 국민통합 등을 통해

‘미디어 관련법’ 강행처리에 따른 후

폭풍의 최소화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던 본회의장 앞 중앙홀 등

을 비롯해 곳곳에서는 양당 의원들과

보좌진 사이에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잇따라 발생했다. 또, 한나라당이 이

날 미디어 관련법안을 강행처리함에

따라 전남의 최대 현안 법안인 F1 지

원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처럼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기사 3·4·5면>

이를 반영하듯 당장 민주당은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고,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 법이 통과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여권은 내각과 청와대 개편 등의 국정쇄신과 국민통합 등을 통해

‘미디어 관련법’ 강행처리에 따른 후

폭풍의 최소화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던 본회의장 앞 중앙홀 등

을 비롯해 곳곳에서는 양당 의원들과

보좌진 사이에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잇따라 발생했다. 또, 한나라당이 이

날 미디어 관련법안을 강행처리함에

따라 전남의 최대 현안 법안인 F1 지

원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처럼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미디어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기사 3·4·5면>

이를 반영하듯 당장 민주당은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고,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 법이 통과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